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1.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침묵하는 지역신문

MC/ 오늘 준비해 오신 첫 소식은요?

민/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침묵하는 지역신문입니다.

지난 2월 16일,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1월 3일에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승강기 끼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국제강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2021년 1월과 2월, 연이어 동국제강, 포항공장과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데... 심지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보면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었습니다.

MC/ 방금 언급하신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만인율'이 좀 생소한데요.

민/ 네, 고용노동부는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인율이란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두 1만 명일 때, 산재사고에 따른 사망률을 보는 것으로. 원청보다 하청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사업장 중 1위가 동국제강 인천공장이었다는 겁니다.

MC/ 아...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에서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말이네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민/ 네, 최근 5년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2건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 말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배관 폭발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고는 7월 말에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이 사고가 알려지지 않았고, 보름이 지

난 14일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이 산재 사망사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 조치를 받으면서 여타 언론들이 이 소식을 기사로 냈고 그러면서 산재 사망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동국제강 배관폭발 사망사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조치와 관련한 기사도 없었습니다.

MC/ 작년 1월에도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민/ 네, 작년에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유압기끼임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의 노동자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향신문 <부산서 철강공장 유압기 수리 중 작업자 2명 사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월을 한정해서 포털에 '동국제강'을 검색해 보니 총 116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압기끼임 산재사망사고는 경향신문과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나머지 기사로는 14일에 동국제강이 인천·부산·당진 지역주민에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는데, 이 소식을 전한게 43건이었고 또 31일에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기사가 35건 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동국제강 부산공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기사가 없었는데에 반해/ 기부 소식은 모두 기사가 있었습니다.

MC/ 그럼 올해 발생한 동국제강 부산공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어땠나요?

미진/ 네, 2월 16일에 발생한 동국제강 부산공장 산재사망사고는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부산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보도는 KBS부산 <동국제강서 또 안전사고...혼자 일하다 숨져>입니다. 해당 리포팅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주목합니다. 기자는 "코일의 무게는 각각 6.3톤과 13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로 보입니다"라 서술함으로써 사고 당시 2인1조 근무규정이 지켜졌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한 후, "위험한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은 없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공인노무사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2인 1조 근무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부산MBC는 <동국제강 또 사망 사고… '크레인 오작동' 추정>(17일, 3번째)으로 보도했습니다. 동국제강 관계자, 경찰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인터뷰이로 등장했고, 이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의 추정을 리포팅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KNN은 단신으로 <동국제강 공장서 코일에 낀 직원 숨져>(2/17)를, 국제신문은 <동국제강 부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2/18, 6면)를 전달했습니다.

MC/ 1월에 발생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경북지역 신문인 매일신문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보셨다고요?

민/ 매일신문은 1월 5일 첫 보도 이후, 잦은 승강기 고장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 동국제강과 노동자의 고용관계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흡한 안전대책과 대조적으로 동국제강 경영진의 연봉이 국내 철강회사 1, 2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다면요?

미진/ 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19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보면 부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33곳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현장, 부산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이유,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 등을 점검한 지역언론은 없었습니다.

요즘이 선거국면인만큼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지역언론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하면서,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다음 소식은요?

2.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민/ 네, 미디어 현안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시청율, 라디오는 청취율, 유튜브는

조회수가 영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신문도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은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와 그 과정 중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준비해 왔습니다.

MC/ 신문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비슷하게, 신문구독률을 가지고 신문의 영향력을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 네, 신문은 먼저 발행부수와 발송부수, 그 발송부수 중에서도 유료부수율이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데요. 발행부수는 말 그대로 해당 신문사가 신문을 얼마나 찍었는가이고 발송부수는 그 찍은 신문 중에서 신문사가 외부로 발송한 부수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각 지국으로 발송한 신문인거죠.

근데 이 지국으로 신문을 발송할 때도, 100곳이면 100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좀 여유롭게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내고 이 신문을 받아보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유료부수입니다.

MC/ 그러니까 여유롭게 보내는 신문 부수는 유료부수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근데 최근에 이 유료부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민/ 네,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ABC협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국ABC협회는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 기관으로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이 “일간신문 부수 조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되면서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진정서를 보면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A신문(조선일보)은 발행부수 대비 95.94%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9년도(2018년분) 공사결과 B신문(한겨레)은 93.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는 예를 들면서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BC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을 내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100부를 발행하면 94부가 돈을 내고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건데, 현실불가능한 지표인거죠.

MC/ 진정서를 접수한 문체부가 실제 각 언론사의 지국에 나가서 유료부수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민/ 네, 문체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언론사의 실제 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유료부수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였습니다.

MC/ 95%와 49%로는 차이가 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민/ 네, 사실 언론계에서 부풀려진 신문부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는데요. 적게는 1/3에서 1/2의 신문이 바로 폐기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음에도 유료부수가 그에 맞춰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MC/ 이렇게 유료부수율을 조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 네, 이 유료부수가 광고비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는 신문, 유료부수율이 높은 신문에 높은 광고 단가가 책정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그간 조작돼 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조선일보는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동아일보는 95억1500여만원, 중앙일보는 83억2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체부 조사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간 부수를 부풀려 광고 단가를 올려 받은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광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 24일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깝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문미진 모니터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